



북한의 대내외형세 정면돌파전과 대북 4대 복합전략

하영선
EAI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 북핵위기의 역사

- 1차핵위기(1993-1994): 북한 NPT탈퇴선언/유엔제재825/제네바 합의
- 2차핵위기(2002-2005.9): 미 국무부 켈리차관보 방북/베이징 성명
- 3차핵위기(2006-2007.2): 북한 장거리미사일, 1차 핵실험(10.9)/ 유엔제재1695,1718/ 공동성명이행 초기 합의서(2007.2.13)
- 4차핵위기(2009): 은하2호발사/2차 핵실험(5.25)/유엔제재1874
- 5차핵위기(2013): 은하3호발사/3차핵실험(2.12)/유엔제재2087,2094
- 6차핵위기(2016.1): 4차 핵실험(1.6)/유엔제재 2270
- 7차핵위기(2016.9-2017): 5차 핵실험(9.9)/유엔제재 2321,2356
- 8차핵위기(2017.7-12): ICBM 화성-14형 2회 발사/ 6차 핵실험(9.3)/핵무기 연구소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성공“/ ICBM 화성 15형 발사(11.29)/유엔제재 2371,2375,2397
- 9차핵위기(2019.12-) 김정은 위원장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고

■ 북한의 대내외형세 정면 돌파전

- 김정은 위원장 2019년 12월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조성된 대내외 형세하에서 우리의 당면한 투쟁 방향에 대하여’ 보고
-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현단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라는 기본 전략구상을 밝힌 시정연설
- 12월 보고는 대내외 형세의 난관을 특별히 강조.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앞에 봉착한 도전은 남들 같으면 하루도 지탱하지 못하고 물러앉을 혹독하고 위험천만한 격난 이었다”고 평가
- 금년 투쟁 구호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
- 보고는 대내외 형세를 분석하면서 제재 압박의 대외적 난관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대내적 난관을 특별히 강조
- 북한 형 3단계 비핵화론의 이행 과정에서 부딪치는 대외적 난관
- 2018년 4월 신전략노선 채택 이후 북한형 3단계 비핵화론 반복 주장 첫 단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 로켓트 시험발사 중지와 핵 시험장 폐기의 선제 신뢰 구축 조치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지를 유도
- 두 번째 단계, 영변 핵시설 폐쇄 대신,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체제보장을 위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종식과 경제 제재 완화를 요구
- 세 번째 단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조선반도 비핵화’의 시각에서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핵군축회담을 제안
- 북한은 “우리의 외부환경이 병진의 길을 걸을 때에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여전히 적대적 행위와 핵 위협 공갈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가시적 경제 성과와 복락 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단언

-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북한은 2013년 3월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2018년 4월 핵 기반 경제건설 집중노선을 거쳐 다시 한 번 제2의 병직 노선을 강조
- 대외적 난관의 정면돌파전으로서 지속적 핵무기 개발로 미국의 안보를 직접 위협해서 실질적인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난관을 돌파하기 보다는 심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북한의 핵 억제력이 강화되면 될수록 제재는 심화되어 체제를 보장하기 보다는 역설적으로 체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핵 비확산을 세계질서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미국은 완전 비핵화 대신 최소 억제력을 유지하는 핵동결을 시도하는 북한의 노력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둘째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난관을 해결하기 위한 정면돌파전에서 기본 전선은 경제전선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제 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장비력을 총 발동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을 현시기 경제부문의 우선 당면과업으로 제시
- ‘적대세력들의 악착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2019년의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이 현저한 성장 추세를 보였다고 언급하면서도, 당면한 경제 실태에 대해 “국가경제의 발전 동력이 회복되지 못하여 나라의 형편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 못하고 있으며 중요한 경제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집행력, 통제력이 미약”하다고 지적
- 보고는 북한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 문제를 자력갱생과 제재의 대결로 압축. 그러나 “경제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지금껏 목숨처럼 지켜 온 존엄을 팔 수는 없다”고 강조
- 따라서 제재해제를 기다리며 자강력을 키우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제재 세력들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므로,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제재붕쇄 책동을 총파탄 시키기 위한 정면돌파전에 매진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
- 그러나 북한이 당면한 경제 전선은 자력갱생만으로 정면 돌파할 수는 없다.
- 중국 경제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의 국민총생산 14조 달러,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1978년이래 지난 40여년 동안 개혁개방 노선에 따라 고도 성장을 거듭했기 때문.
- 1인당 국민소득 1천 달러 수준의 북한경제가 21세기 세계 경제 무대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중국을 넘어 선 장기간의 고도 성장을 필요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통한 제재 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 대북 4대 복합전략

- 김정은 위원장은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우리는 오늘의 투쟁에서 객관적 요인의 지배를 받으며 그에 순응하는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나가 객관적 요인이 우리에게 지배되게 하여야 합니다.”라고 마무리.
- 그러나 핵 억제력과 자력갱생으로 현재의 난관을 성공적으로 돌파하기는 불가능.
- 북한의 진정한 정면 돌파전은 비핵화와 개방경제의 길을 질주하면서도 목숨처럼 소중한 안전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 북한은 지난 시정연설과는 달리 이번 보고에서는 남북관계를 전혀 다루지 않고 국제역량과 국내역량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제역량과 독자적으로 움질일 수 없는 한국역량이 북한의 오래된 정면 돌파전에 큰 도움을 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한국의 진정한 역할은 북한이 오래된 정면돌파전대신 새로운 정면돌파전으로 현재의 난관을 돌파하는 길을 국제역량과 함께 마련해서 북한의 국내역량이 스스로 새 길을 달리도록 해야 한다
 - 가) 제재: 효율적 제재의 지속 이행/ 제재 목적은 핵경제 병진노선의 포기/중장기 제재 로드맵 제시로 국내외 공감대 확산 추진
 - 나) 억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안보태세 구축/미국전략자산 순환 배치를 통한

- 확장어지체제의 최대 활용. 한국형 선제타격체제/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대량응징보복체제의 3축체제를 조기 구축
- 다) 포용: 핵화의 비용 극대화와 비핵화의 이익 극대화 필요 / 비현실적 북한형 대신 현실적 북합평화체제구상 마련 /북한 비핵 경제발전 신병진노선의 지구적 경제 지원
- 라) 내부 변환: 북한의 시장화/북한의 정보화 / 3대 진화역량 강화 / 북한의 자발적 비핵 경제발전 신병진노선 추진

■ 발제자: 하영선_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회의 위원(2018-)이며, 대통령국가안보자문단 (2008-2016) 이었으며, 한일신시대 공동연구 한국 측 공동위원장 (2009-2013) 이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1980-2012)로 재직했으며 미국 프린스턴대학 국제문제연구소 초청연구원,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초청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 미국학연구소장, 한국평화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하영선 칼럼”을 7년 동안 연재하였으며, 한국외교사 연구 모임, 전파 연구 모임, 정보세계정치 학회, 동아시아 연구원 모임 등을 이끌며 한국 국제정치학의 길을 개척해 왔다. 최근 저서 및 편저로는 《사랑의 세계정치: 전쟁과 평화》(2019), 《한국외교사 바로보기: 전통과 근대》(2019), 《냉전기 한국사회과학 개념사》(2018), 《한국 사회과학 개념사: 조공에서 정보화까지》(2018), 《미중의 아태질서 건축경쟁》(2017), 《사행의 국제정치:16-19세기 조천·연행록 분석》(2016), 《1972 한반도와 주변 4강 2014》(2015),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0: 억제·관여·신뢰의 복합추진》(2014), 《신시대 한일협력 7 대과제》(2013), 《하영선 국제정치 칼럼 1991-2011》(2012),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1/2》(2009/2012), 《북합세계정치론 : 전략과 원리 그리고 새로운 질서》(2012), 《역사 속의 젊은 그들》(2011), 《북한 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2010), 《한일신시대를 위한 제언: 공생을 위한 북합 네트워크의 구축》(2010)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백진경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9) j.baek@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 본 발제문은 동아시아연구원이 2020년 1월 21일 개최한 [Global NK 핵inSIDE 토크] 2020 동아시아연구원 대북 통일전략 토론회의 자료입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



해도(海図) 없는 항해—한반도의 세력균형체제?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기주쿠대학 명예교수

■ 분석시각—‘역사적인 기회’?

한반도의 국제정치 분석에는 리얼리즘과 리버럴리즘 만이 아니라 퀴스트럭티비즘(구성주의)의 시점이 불가결하다. 행위주체가 처해 있는 역사적 기억, 지정학적 조건, 이데올로기, 전통정치, 리더십의 특징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 자신을 포함하여 많은 지역연구자는 구성주의자이며 북한은 무엇을 위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가, 약2년간에 걸친 벼랑 끝 정책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무엇을 달성하려고 했는가, 남북대화 와 대미외교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실현하려고 하는가 등의 의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실 3인의 개성적인 지도자의 조합 없이는 두 번의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는 게임이론적인 시점도 중요하다. 현재 기본적으로는 북미의 2인 게임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것은 한국이나 중국의 지도자를 포함하는 3 내지 4인 게임이기도 하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는 포커게임에서처럼 ‘홍정’ 과 ‘속임’ 이 다용되고 있다.

결론을 미리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먼저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핵 미사일의 완성에 전력을 기울여 실험을 반복한 후에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장기적인 생존을 가능하게 할 체제보증과 분쟁의 국지화(「적시정책의 철회와 평화체제의 확립」/제재해제, 전쟁종결 선언, 미군 프레젠스의 축소 등)을 획득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괄적인 비핵화’가 아니라 ‘단계적인 비핵화’가 불가결하다. 또한 북한의 본격적인 경제개발, 즉 개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 북미, 그리고 북일관계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최고지도자와의 ‘빅 딜’ 을 통해 군사력 행사 없이 북한의 비핵화를 일거에 실현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차별화를 꾀하려 했다. 독재·권위주의체제와의 친화성과 군사개입의 억제도 트럼프 정권의 특징이다. 더욱이 하노이에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한 외교는 여전히 트럼프 정권의 몇 안되는 성공사례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기초한 경제제재가 엄격하게 유지된다면 시간은 미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일괄타결’ 에 응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회피를 우선하여 남북대화를 선행시켜 북미교섭을 증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을 병행적이며 단계적으로 실행하려고 했다.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에도 문재인은 평양을 방문하여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군사적인 적대관계를 종식시켜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약속했다. 또한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위한 길을 개척했다. 그러나 북미교섭이 정체되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완화되지 않고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도 정체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문제에 대한 대응은 대미정책의 일부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 그리고 교섭에 의한 문제해결이라는 세가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제재 결의를 준수하려고 했다. 김정은의 후견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미교섭과 남북대화의 진전을 주의 깊게 지켜봐 왔다. 중국이 경계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군사적

인 긴장이 극한으로 증대되거나 미국의 영향력이 북한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한편, 비핵화의 진전과 평화체제의 구축은 미군 프레젠턄을 위한 논리적인 근거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중국에게는 호의적인 재료이다. 그와는 반대로 미국과의 교섭에 실패한다면, 북한은 중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의 북미교섭과 남북대화의 경과를 검토하면 이상과 같은 결론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들이 한반도에서 직면하고 있는 것은 남북한의 비핵·공존과 미중간의 세력 균형, 즉 ‘느슨한 2+2’로의 단계적인 이행의 실험이며, 그 과정에서 직면할 많은 함정이라 하겠다. 사실, 6월 20일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그 전날 『로동신문』에 논문을 기고하여 “김정은 동지의 바른 결단과 해당 각 측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한반도에 평화와 대화의 대세가 형성되어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쉽지 않은 역사적인 기회가 만들어져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정과 기대를 획득했다”고 지적하고, 더 나아가 조선의 동지들과 함께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작성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세력균형 실험이 1970년대의 유럽의 데탕트(détente)와 이어진 헬싱키 체제와 같은 형태로 결실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세력균형 만이 아니라, 그것을 안정적인 체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불가결하다. 바꾸어 말하면 체제로서의 세력균형은 단순히 군사균형이나 상호억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각국이 지역적인 국제정치의 현상을 승인하고, 적어도 목적, 규범, 여론, 경험 등을 공유하여 그 기반위에서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당사자인 남북한 자신이 그것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외교적인 기술을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반도에서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사실 최근 일한관계가 큰 곤란에 직면하고 그것이 한미일 안보관계에 파급되려고 했다. 한국인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한반도의 세력균형을 위한 실험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북중관계의 현상 유지를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일한관계의 대담한 현상변경을 억제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일본정부가 수출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대항했기 때문에 일시적이긴 했지만, 일한 GSOMIA(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 파기되어 미국정부가 강하게 반응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

■ 장기적인 예측 불가능성

하노이 정상회담 약2주 후, 3월 15일 폭스뉴스의 인터뷰에 응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우리들은 충분하고 최종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합의(FFVD)를 획득하지 못했지만 전진했다고 생각한다. 수주간의 논의에서 북한의 입장에 대해 많은 것을 학습했다. 그 후에도 조금 더 배웠다. 이것은 긴 프로세스이다. 대통령은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고 핵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좋은 출발점이라고 항상 말하고 있다. 우리들은 무엇이 최종적인 목표인가 알고 있다”고 언명했다. 또한 최근 불탄 보좌관을 해임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불탄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에 ‘리비아 모델’에 대해서 말한 것은 ‘대참사’라고 표현했다.

한편, 하노이 정상회담 후의 트럼프와 김정은의 신경전을 반영한 것이 6월 30일 G20 오사카 회의의 귀로에 실현된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단시간의 회담이었다. 6월 중에 몇 번인가 서한이 왕래되는 과정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판문점에서의 재회를 제안한 것 같다. 6월 23일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명하고, “흥미로운 내용을 신중히 생각해 보겠다”고 반응했다. 트럼프가 29일 트위터로 제안하기 전에 판문점 회담은 준비되었던 것이다. 두 사람의 최고지도자는 북미교섭의 단절을 우려해 그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던 것이다. 또한 그것과 관련하여 미국측의 실무담당자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기 이전에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완전한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된 것 같다. 북미정상회담을 상정하여 그것을 ‘단계적 비핵화’의 출발점으로 검토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하노이에서 집착했던 ‘빅딜’과 ‘일괄타결’ 방식에서 이탈해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북한측의 강경한 태도로 볼 때, 북미

간의 딜은 영변 핵시설을 중심으로 한 것(‘영변+α’)에 그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미국측은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인 비핵화’의 내용과 방법을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라늄농축시설과 대량살상무기의 소재에 관한 정확한 리스트, 그것들의 단계적인 폐기 방법과 일정 ICBM의 국외반출 등 주요한 것만으로도 쉽게 합의를 얻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그 대가로 북한은 어떤 ‘체제보증’을 획득할 수 있을까? 제재완화의 범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남북경제협력 등에 대해 북한측은 가능한 많은 것을 획득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핵화와 체제보증의 균형점을 찾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비록 정상회담이 실현된다고 해도 북미 비핵화 교섭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가 고비를 넘기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교섭할 의욕을 잃을 것이다. 물론 큰 합의가 얻어진다면 사태는 급진전 될 것이다. 가장 극적인 전개는 선거캠페인 중에 실무교섭이 타결되고 김정은이 백악관을 방문하는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곤란한 교섭의 후에 얻어질 극적인 성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지 않는다면, 차기 미국 대통령은 북미합의를 용인할 것인가? 혹은 재선된다고 해도 제1단계 비핵화가 순조롭게 실시될지 알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이 진전되기까지 북한은 ICBM의 폐기를 완료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핵무기의 해체는 더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2022년 5월의 한국 대통령선거에서는 누가 당선될까? 그것은 남북대화와 평화체제구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단계적인 비핵화라해도 북미간에 비핵화 합의가 성립된다면 거의 확실히 아베 수상은 평양을 방문할 것이다. 그러나, 북일평양선언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2002년 9월에 고이즈미 수상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것에 서명했던 당시와는 국제정세가 완전히 달라졌다.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서는 장거리탄도미사일 보다는 중거리·준중거리탄도미사일의 규제가 중요하다. 그것은 북일2국간 교섭에 의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한 납치문제도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북일관계가 정상화되고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이 제공된다고 해도 그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과 병행해서 진전될 것이다.

따라서 제2기 트럼프정권 이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앞날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장기에 걸친 해도(海圖) 없는 항해이다. 모두에서 본 것처럼 우리들이 한반도에서 직면하고 있는 것은 남북간의 비핵·공존과 미중간의 세력균형(느슨한‘2+2’)의 형성이며, 더 나아가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한 6자간의 세력균형체제(‘2+2+2’)의 창조이다. 시진핑 주석이 지적한 것처럼 그것은 ‘원대한 계획’이다. 또한 그것이 실행되는 도중에 한반도 정세와는 관계가 없는 국제정세, 예를 들면, 미중관계가 더욱더 악화되거나 리만쇼크와 같은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국제정치의 세계에서는 한번 항구를 떠난 배는 쉽게 되돌아갈 수 없다.

■ Appendix: 김정은 위원장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북한 최고지도자의 신년사를 분석하는 게 신년을 맞이하는 습관처럼 돼 있다. 하지만 작년 12월 28일부터 4일 연속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올해는 거기에 대한 1월1일 공식보도가 신년사를 대신하는 역할을 했다. 그 보도는 ‘북한이 당면한 전투방향’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자주 소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몇 개의 전략개념을 강조했는데, 첫 번째는 ‘정면돌파전’이다. 평화에 대한 환상과 제재 해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수동적인 방어가 아닌 능동적인 공격’에 따른 ‘전대미문의 엄격한 난국’을 정면 돌파한다고 주장했다.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옹기겠다’는 것도 예고했다.

거기에 보이는 것은 마오쩌둥(毛澤東) 이래 지속된 ‘적극방어’ 사고다. 통상 ‘정면돌파전’은 단기전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은 단기결전이 아니라 ‘자력갱생’으로 ‘미국과 장기적인 대립’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의미 깊은 점은 김 위원장이 미국의 대북 전략에 대해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갑진하면서 자신의 정치외교적 잇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여 우리의 힘을 점차

소모약화시키자는 것' 이라고 정확히 지적했다. 그것을 '자력갱생과 (경제) 제재와의 대결' 로 정의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구전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렇다면 '세계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 이라는 지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김 위원장은 그게 '주변 정치 정세의 통제력을 제고하고 적들에게는 심대하고도 혹심한 불안과 공포의 타격을 안겨줄 것' 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한편, 지적된 것보다 지적되지 않은 게 중요할지도 모르겠다.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에 대미교섭 중단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없었다. '고난의 행군' 도 '선군정치' 도 존재하지 않았고,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 으로의 복귀도 없었다.

더구나 올해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의 최종연도인데도 거기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 또 '인민생활 향상' 이란 슬로건이 사라지고, 새로운 '10대 전망목표' 가 등장했다. 단기전과 장기전 개념이 혼재돼 자신과 불안이 섞여 있는 것이다.

북한의 '당면 투쟁방향' 에 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 나가겠다' 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다.

이 표현은 2017년 7월4일 북한이 처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을 강행한 직후에 나온 김정은의 발언과 매우 닮았다. 그 때에도 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의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핵과 탄도미사일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지만 반년 후 남북대화, 그 후 북미협상에 들어갔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필시 단계적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면서 경제제재가 완화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영변핵시설 폐기에 더해 전략병기 개발을 동결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2,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지시키고, 4월 한국총선거 때까지 북미실무교섭 재개에 합의하고 싶어할 것이다.

하지만 2017년 당시처럼 신형 로켓 엔진을 사용해 신형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해 도발하더라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정상회담에 응해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란 정세에 대한 대응으로 자신감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 간단히 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또 터프한 교섭인임을 나타내기 위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다시 파기해 끝내버릴 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의 실패가 반복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위신은 회복되기 힘들 정도로 크게 실추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투쟁방침' 에 보이는 애매함과 자신감 결여는 이 때문일 것이다. (『東亞日報』 1月15日)

■ 발제자: 오코노기 마사오_ 일한포럼 일본측 좌장, 일본방위학회 부회장,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전공은 국제정치론 및 한국·북한정치론이며 게이오대학에서 법학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유학(1972-74년)을 하였다. 하와이대학 조선연구센터 및 조지워싱턴대학 중소연구소 객원연구원(1981-82년), 게이오대학 조교수 및 교수, 지역연구센터 소장, 법학 부장. 일한공동연구포럼 일본측 좌장 (1996-2005년), 제 1차 일한역사공동위원회 일본측 간사 (2002-2005년), 일한신시대공동연구프로젝트 일본측 위원장 (2009-2013년), 고이즈미 준이치로와 후쿠다 야스오 수상의 외교자문위원 및 규슈대학 특임교수 (2011-2014년)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 “조선전쟁—미국의 개입과정”(중앙공론사, 1986년, 한국어판 “한국전쟁—미국의 개입과정” 청계연구소, 1986년)은 게이오기주쿠상을 수상했으며 “조선분단의 기원”(게이오대학출판회, 2018년, 한국어판 “한방도 분단의 기원” 나남, 2019년)은 아시아태평양상, 가시야마준조상 및 이노키마사미치상 등을 수상했다. 편저로는 “탈냉전의 조선반도”(일본국제문제연구소, 1994년), “김정일 시대의 북조선”(일본국제문제연구소, 1999년, 한국어판 “김정일과 현대 북한” 유문화사, 2000년)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백진경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9) j.baek@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 본 발제문은 동아시아연구원이 2020년 1월 21일 개최한 [Global NK 핵inSIDE 토크] 2020 동아시아연구원 대북 통일전략 토론회의 자료입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



북미 비핵화 협상의 현황과 전망

리팅팅
북경대 교수

■ 북미 비핵화 협상 현황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가 2019년 연말을 넘기면서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측은 탄핵 정국에다 이란을 비롯한 중동 문제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고, 북한 측은 정면돌파라는 ‘새로운 길’을 내세우며 교착국면의 장기화를 준비하고 있다. 물론 양측 모두의 절제로 대화의 여지가 아직 열려 있으나 어느 한쪽의 선제적 양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과 중국 등 주요 유관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필요해진 시점이다.

미국 정계에서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을 통해 위기완화를 성사시켰으나 북한에 실질적 상응조치를 이행하거나 약속하기에는 국내 정치적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미국이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에 대한 수용을 시사하며 북한에 협상 재개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결단이 있다기 보다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통한 북한 압박과 비슷한 맥락으로 연말 위기 가능성을 관리하려는 의도가 더 강해 보인다.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 합의에 따라 핵 실험장 폐쇄 조치, 장거리미사일 발사장 해체 작업 등 선제적 신뢰 구축 노력을 했으나, 미국의 상응조치를 얻어내지 못한 데다가 하노이 정상회담의 노딜과 판문점 회동의 행동 대 행동 약속 무산 등을 겪고 나서 미국에 연말까지 새로운 선행을 내놓기를 주문했고, 새해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정면돌파’와 ‘선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후 비핵화 협상 재개’ 등 새로운 입장을 발표하여 일방적인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굳혔다.

이로써 북미 양측의 대화 재개 동력이 모두 저하돼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탄핵과 중동 현안의 진정과 대선 국면의 전개에 따라 다시 북한과의 협상에 시선을 돌릴 수 있지만 미국의 국내 정치에만 맡기기에는 북핵문제의 지역적 중요성이 너무 크다. 한국과 중국은 2018년 이래의 비핵화 협상을 추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비록 그동안 협상의 진척 상황에 따라 견제를 받기도 했으나 앞으로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정세의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 북한의 ‘정면돌파노선’과 경제 상황 평가

북한 측이 최근에 제시한 ‘정면돌파노선’이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의 장기화에 대응하는 방어적 성격이 짙어 보인다. 물론 새로운 전략무기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 만약 핵과 ICBM 실험을 재개했을 경우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을 뿐만 아니라 유엔 제재와 중국, 러시아,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도 큰 부담을 줄 수 밖에 없으니 다른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경제적 정면돌파를 통해 대북제재를 버티고 비핵화 협상에서 ‘시간이 북한 편’으로 만들고 운신의 폭을 넓히는 것이 현재 북한의 더 중요한 당면과제인 것 같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도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라는 표현을 쓴 만큼 제재국면 아래의 경제 발전은 비약적 수준이나 장기적 비전을 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 상황에 비춰 경제적 정

면돌과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할 때도 제재 버티기와 시간 벌기라는 전제 하에서 논의하는 게 더 유의미하다.

대북제재는 2016-2017년 이후 유엔의 일반적인 제재 원칙인 스마트 제재를 넘어 매우 강력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대외무역과 외화수입 등 직접 타격 분야에서 현저한 효과를 보인 반면 북한의 국내 생산이나 가격 체제에 미친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하반기 북한에 방문한 전문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평양의 유통 상황이나 생활용품의 국산화 공급 상황이 전보다 더 좋아진 것으로 관찰되었다. 제재 범위가 관광 등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안정선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다. 북미 협상의 신속 타결을 상정했을 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협상 장기화를 전제로 한 제재 버티기라는 목표 설정에 비춰 봤을 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또한 이번 7기 5차 회의 보고에서 생산장비력과 관리의 문제점을 강조함으로써 그동안 경제 개선 사업의 국내적 난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 제기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추진 과정에서 생산설비 부족으로 인한 일부 관료나 기업소의 능동성 결여, 그리고 제도와 절차상의 제약 등이 큰 보틀넥이 되었다는 분석이 있다. 이번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 강화를 통해 그동안의 경제 개선 사업에 새로운 추진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된다면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결론 및 전망

현 국면에서 한국과 중국 등 주요 이해관계국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상황 관리 차원에서 미국에 연초에 다가올 한미공동군사훈련의 잠정 중단을, 북한에 핵과 미사일 실험의 절제를 설득하고 다른 충돌성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평화 유지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북미 중재 차원을 넘어 중한 양국의 핵심 이익이기도 하다는 것을 늘 분명히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대화 재개를 추진하기 위해 대북 제재완화와 안전보장 방안에 대해 고민과 노력을 같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유엔에서 대북제재의 부분적 완화를 제안한 바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제재완화의 필요성과 접경지역 협력, 관광, 스포츠 등 남북 협력과 유엔제재의 예외적 승인 등 남북 협력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제재완화 절차, 스냅백, 예외 승인 등 구체적인 사안에 공동의 관심사가 있는 만큼 학술적, 국제법 논의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미 협상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감안하여 보완적인 메커니즘이나 다자 협상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발제자: 리팅팅_ 중국 베이징대학교 한국학과 조교수, 베이징대 조선반도연구센터, 아태연구원 연구위원. 베이징대에서 한국어, 경제학 학사와 한국학 석사를, 미국 시카고대에서 역사학 박사를 취득했다. 연세대 국학연구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산정책연구원 등에서 방문연구를 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한반도 정치경제, 한반도 근현대사, 동아시아 국제관계, 지역학 등이다. 최근 연구성과로는 “스마트 제재 이후 유엔 대북제재의 경제적 효과” (2019), “무역 갈등과 한일 관계의 새국면” (2019), “지역학 연구에서 현지지식의 ‘현지성’에 대한 성찰: 한국 발전 연구를 중심으로” (2019), “‘위안부’ 문제와 한일관계: 합의에서 갈등으로” (2019), “China-North Korea Trade in 2015: The Beginning of a Downturn” (2016),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2016), “The Economy of DPRK under Kim Jong Un: Review, Analysis, and Prospects” (2015)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백진경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9) j.baek@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 본 발제문은 동아시아연구원이 2020년 1월 21일 개최한 [Global NK 핵inSIDE 토크] 2020 동아시아연구원 대북 통일전략 토론회의 자료입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



북한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길

최상훈

뉴욕타임스 서울지국장

■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Make our country great again!

트럼프: Make America Great Again!

중국몽: Make China Great Again!

푸틴: Make Russians Feel Proud Again!

북한 사회주의 강성대국: Make DPRK Strong and Great (Again)!

이들 나라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내부적으로 강성국가 강조, 외부세계에 대한 위기감 또는 혐오감 조장. 존엄 과시형 (triumphalist) 지도자. 이런 두 지도자 (김정은 트럼프) 간에 핵과 경제개발 맞교환 협상이 가능할까?

■ 중매와 좌절

문재인대통령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 촉진자로 나선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인정받아야. 과거 보수정부의 압박. 무시 정책도 비핵화에 실패한 상황. 결국은 지난한 외교만 이 해답. 그러나 문대통령의 중매방식이 비현실적 이었다는 비판은 가능. 김정은 정권이 한번도 핵이 빠진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구상하고 있다고 표현한적이 없음. 오히려 반대로 핵개발 완료했으니 이제 경제개발에 집중할 여력이 생겼다는 주장. 김정은에게 핵은 정권의 명운이 걸린 쉽게 팔 수 없는 부동산. 북한의 핵능력고도화로 미국이 과거 고자세를 꺾고 양보할거라 생각하는듯. 트럼프에게 북한 핵은 투기성 거래의 대상. 실제 트럼프는 북핵협상에서 치고빠지기식 (erratic) 행보를 보임: 중국 도움 요청했다가 나중에 "totally destroy North Korea" 협박. 대화 시도 킬러슨 문책했다가 김정은 만나면 "영광" (honored) 이라고 말할. 심지어 "fell in love"라 말하기도. 그러면서 이란식 핵협상을 실패라 규정해 대북협상에서 타결여지를 상당히 줄여버림. 김정은과 트럼프는 둘다 과시하고 싶지만 서로 과시하고 싶은 내용이 다름. 결국 top-down approach는 사랑/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만나 예물교환협상에서 과도. 상대방 예물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커 성사되기 어려운 중매. 중매쟁이의 오판: '낭만적 민족주의'에 빠져 김정은과 북한의 계산법에 눈이 멀고 미국외교. 정치권과 교류.이해 부족으로 트럼프의 충동즉흥적 부동산거래식 외교에 과도한 희망적 기대를 한 건 아닌지?

문재인 대통령은 과시형 인물들이 득세한 동북아에선 결이 다른 지도자로 인식됨. 과거회귀성 지도자의 탄핵 후 등장한 liberal democracy 상징적 인물: 평소 정의, 인권, 소수, 표현의 자유 등 강조. '야당북'이라 하지만 아직도 40%지지층 유지에는 이러한 이미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듯 (광화문 광장 데모허용 등). 그러나 문재인 역시 실재론 상당히 sentimental 민족주의적 지도자란 비판 직면. 김정은의 국제무대데뷔에 적극 역할. 그러면서 인권변호사 출신이 북한인권은 무시한다는 비판받고 있음.. 선거 때와 최근 지소미아사태 때 '친일파' 청산내세움. 위안부합의파기 등 일본과 긴장관계. 지소미아파기결정으로 '반일에는 한미동맹도 없다'는 비판직면. 결국 21세기 우물 안 개구리란 비판

직면: 미국 등 주변국과 북한해법인식격차. echo chamber식 외교: 같은 생각하는 사람끼리 모여 기존 생각과 이념을 서로 재확인/재생산하며 다른 주장과 견해는 차단한다는 비판직면. 동시에 한국 스스로 주도적 외교역할을 못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음.

■ 새로운 길을 위한 새로운 질문들

3 번의 북미 정상만남으로 분명해진 것:

- 1) 트럼프와 김정은 둘 다 reality show 같은 과시형 흥행을 좋아한다.
- 2) 북미간 그 어느 때보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카드를 많이 보여주었으며 그 결과 양쪽의 간격이 분명히 드러남. 북한은 제재 없는 (중소) 핵국가로 인정받으며 비핵화는 '핵 없는 세상'에서나 가능한 먼 일로 여김.

주변국들도 대북 정책에 '새로운 길'을 모색 해야 하는 건 아닌지?

- 비핵화 외교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외교적 노력의 주축이 이미 핵무장한 북한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로 옮겨가야 하지 않을까? 한국에서 공론은 어떻게 하던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거침. 다른 가능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은 신문방송에 잘 보이지 않는 듯. 북한은 핵 가지고 한반도 맹주행세 하려고 함. 지금 같은 상황 (일시적 협상과 긴장이 반복되며 북한의 핵미사일능력은 계속 증가: 비핵화의 가격표는 폭등 하는 상황) 이 계속된다면? 미국이 혹시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합의를 한다면?
- 남북통일을 절대적 과제로 보는 태도가 북한 변화에 오히려 걸림돌은 아닌지? (물론 헌법에 명시되었지만) '민족통일' 또는 '민족화해'식 사고방식이 아직도 유효한 대북. 비핵화 전략인가?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우면서도 화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한국 문재인 정부를 비하하는 등 수많은 반통일적 행동. 북한에게 '부끄러우니 같은 민족이라 부르지 말라'는 자세가 필요한 건 아닌지?
- 미중 갈등이 한국에겐 기회이자 큰 위기. 북한 핵 해법에 미국식. 중국식 양자택일을 강요 받는 상황이 온다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한국을 한미일 고리에서 뜯어내려는 중국의 시도는 갈수록 노골적. 한편 트럼프행정부는 동맹국의 핵위협인 북한 중.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별 개이치 않는 듯한 태도. 그러면서 방위부 분담증액요구/핵우산제공 가격을 높이는 상황. 트럼프시대 미국에 대한 불안/fear 는 증가 respect 는 줄어듦. 일본 아베는 이 기회에 한국 길들이겠다는 시도. 트럼프 이후에도 트럼프식 일방주의가 계속될 경우 한미동맹은?

■ 발제자: 최상훈_ The New York Times 서울지국장. 한국과 미얀마 관련 취재로 Pulitzer Prize, George Polk Award, 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Award, Asia Society's Osborn Elliott Prize, Johns Hopkins University's Novartis Award, Human Rights Press Award in Asia, 한국기자협회상, 삼성언론상, Overseas Press Club Award (2 회 수상), Society of Publishers in Asia Award (2 회 수상), New York Times Publisher's Award (5 회 수상) 등 다수 언론상을 수상하였다. 저서 및 편저로는 <<The Bridge at No Gun Ri>> (Henry Holt, New York 공저, 2001); <<How Koreans Talk>> (은행나무, 서울, 공저, 2002); <<Korea Witness: 135 Years of War, Crisis and News i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은행나무, 서울, 공편, 2006); <<Troubled Transition: North Korea's Politics, Economy and External Relations>> (Stanford University, 공편, 2013)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백진경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9) j.baek@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 본 발제문은 동아시아연구원이 2020년 1월 21일 개최한 [Global NK 핵inSIDE 토크] 2020 동아시아연구원 대북 통일전략 토론회의 자료입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



1세션 “4대 대북 복합전략과 한반도의 미래” 토론편

박원근
한동대 교수

■ 북한의 정면돌파 노선

북한은 2019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돌파전을 벌릴 데 대한 혁명적 노선”(약칭 ‘정면돌파노선’)을 선언하였다.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를 기반으로 미국과의 장기전을 선포한 것으로 정면돌파를 통해 “미국의 제제봉쇄책동을 돌파탄”내고자 한다.

구체적 수단으로 경제, 군사, 사상 등이 제시되었다. 경제측면에서는 미국이 북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제제는 지속적으로 부과될 것이므로 북한은 자력갱생을 통해 이를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천명되었다. 군사측면에서는 북한이 유예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여지를 표명했으나 해석의 여지를 두었다. 그러나 전략무기의 경우 지속적인 개발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사상의 경우 결정서 5항을 통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 강화”를 강조하였다.

북한은 미국 대선이 있는 올해를 1차 기한으로 삼고 정면돌파를 통한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도발과 대화의 양면전략을 구사하면서 미국의 대선 국면을 최대한 이용하는 전략을 통해 북한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작년 10월 밝힌 ‘발전권과 생존권’의 선 보장을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필요하면 대화에 응할 수도 있으나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는 않을 것이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2020년 1월 11일 담화를 통해 “일부 유엔 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시설을 통채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웰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라고 재차 밝힌 바 있다. 북한은 미 국내의 상황을 감지하면서 저강도 도발을 통해 긴장을 고조하고 미국을 압박할 것이다. 다만 ICBM이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의 강력한 반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제한, 이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사용할 카드 부재 등의 이유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지난 2년간의 대미 대화를 사실상 ‘실패’로 규정하고 판을 엮고 이전의 강압 정책으로 돌아갈 수 있다. ‘벼랑끝 전술’은 북한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이고 김정은 주변에 합리적인 조언을 할 인물이 없다는 측면에서도 북한이 금지선을 넘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수도 있다.

대남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대한 의도적인 배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은 2019년 1월 신년사와 4월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의 역할을 규정한 바 있다. 2019년 1월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4월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은 “오지랖넓은 <<중재자>>, <<촉진자>>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압박하였다. 2020년 1월 11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를 통해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는 미련이 의연 남아있는것 같다”면서 “자중하고있는것이 좋을 것”이라 비난하였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국제 공조에서 이탈하여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전면 재개하기 전까지 한국과는 어떠한 의미 있는 교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

로 읽힌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 북한은 사실상 한국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으로도 판단된다. 작년 말부터 요구한 남측의 금강산 시설 철거를 2020년 2월로 기간을 한정한 것은 중국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중국이 대북 관광객 100만명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회자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중국 관광객 대부분이 접경지역에서 머무르는 관광 형태를 탈피하여 금강산과 원산·갈마를 잇는 내륙 관광을 통해 체류기간을 늘려 외화벌이를 강화하려 한다. 이 경우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은 대폭 감소한다.

■ 한국의 대북정책

철저한 한미의 대북공조가 필요하다. 한미는 북한의 장기전이 2018년 시작된 협상 국면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북한이 판을 깰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선 국면으로 단기 이해에 치중할 가능성이 큰 반면 한국 정부는 여전히 남북관계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이 움직일 방향에 대해 한미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미 한국 정부는 북한의 수용 가능성도 불분명한 개별관광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한미는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대북정책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공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 금지선을 넘을 경우 한미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이른 바 ‘플랜 B’도 협의해야 한다. 2017년 경험한 ‘화염과 분노’로 대변되는 군사적 긴장 격화는 피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방안에 대해 사전 협의가 한미간 필요하다.

중장기 대북정책을 한미가 공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장기 대북정책 없이 단기적 ‘관리’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의 대북정책, 특히 비핵화 정책은 북한 입장을 주로 반영하여 수시로 바뀌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핵동결입구, 비핵화 출구’를 제시한 이후 2018년 3월 ‘일괄타결,’ 2018년 4-6월에는 ‘포괄적 합의 후 단계적 이행,’ 2018년 9.19 이후는 ‘단계적 해법,’ 2019년 3월에는 ‘Good Enough Deal, 조기 수확,’ 2019년 3월 이후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2019년 10월 이후는 ‘대북 선제 상응조치’로 변화하였다. 한미는 비핵화 정의, 목표, 최종상태, 상응조치 등을 포함한 비핵화 정책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북한이 금지선을 넘지 않도록 한미가 국제공조를 이끌어야 한다.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 한미는 연합훈련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미는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북한에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 북한은 현재 한미와 공식·비공식 대화 채널을 모두 닫은 것으로 알려진 반면 중국과는 오히려 다방면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도 북한의 고강도 도발, 특히 ICBM 발사 시험은 민감한 사안이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미국은 역내 미사일 방어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중거리핵전력(INF) 협정 폐기 후 고려중인 역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의 명분을 확보할 여지가 있다. 중국이 사활적 이해 침해로 여기는 사안이다. 따라서 한미는 중국의 우려를 활용하여 공조함으로써 북한의 금지선을 넘는 도발을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는 억지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 요소가 아니더라도 한미동맹은 이미 여러 측면에서 도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정책은 비용 대 효과를 우선시하는 자국 우선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의 영구 중단을 상응조치로 북한에게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권 전환도 미국의 책임 경감 차원에서 접근하여 조건에 기초하지 않더라도 조기 전환에 동의할 수 있다. 방위비 분담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를 조정할 수도 있다. 한국 정부도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하므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상응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될 수 있는 동맹 조정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도 원하는 전시작전권을 조건에 면밀히 기초하지 않은 정치적 결단으로 전환할 수 있다. 더불어 한국 범정부 인사들의 발언에서도 확인되듯이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도 쉽게 용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관련된 한미의 협력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한미 정부 당국의 기본 인식, 북한의 요구 등이 결합하여 동맹의 이완 현상이 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미 모두 정부 밖 행위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방수권법을 통해 보여준

미 의회의 한국 방어 의지와 같이 다양한 세력이 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미 정부 당국의 일방적 조치를 경고하는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 **토론자:** 박원곤_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 교수. 연세대학교를 수료한 후 미국 남서침례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보스톤 컬리지에서 석사학위,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연구위원과 대외협력실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한동대 Grace School 부원장,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아산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한반도평화연구원 연구이사, 한국 유엔아카데미임팩트 사무처장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YTN 프로그램인 '더뉴스'에서 국제이슈를 다루는 '더 넓은 세상'에 고정 출연하고 있다. 주요 연구물로는 "Changes in US-China Relations and Korea's Strategy: Security Perspective" (2019),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2019), "카터의 인권외교와 한미관계 - 충돌, 변형, 조정" (2019),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미동맹 조정 로드맵" (2018), 공저, "트럼프 행정부 안보·국방전략 분석/전망과 한미동맹 발전 방향" (2017), 공저, "미 신행정부 국방전략 전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제3차 상쇄전략'의 수용 및 변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2017)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백진경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9) j.baek@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 본 토론문은 동아시아연구원이 2020년 1월 21일 개최한 [Global NK 핵inSIDE 토크] 2020 동아시아연구원 대북 통일전략 토론회의 자료입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



1세션 “4대 대북 복합전략과 한반도의 미래” 토론의 요지

이원덕

국민대 교수

■ 하영선 EAI 이사장, 서울대 명예 교수 발표에 대한 토론의 요지

1) 핵 위기와 핵실험의 불일치

- 핵 실험= 핵 위기의 등식에서 벗어난 세 번의 사태 중 2019년 12월28일부터 4일간 열린 제9차 핵 위기-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고
- 사실상 제2의 병진노선 회귀 선언, 또는 핵실험, ICBM의 발사 가능성 등 도발의 재개 가능성 압박한 것으로 읽어야 하는 건지?

2) 대북 4대 복합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1) 제재 2) 억지 3) 포용 4) 내부변환

- 4개의 전략개념 동시 진행 가능한 것인지?
- 1), 2)의 제재, 억지와 3)포용 개념은 서로 모순되고 상치되는 것으로 보여 얼핏 보기에는 양자택일 적인 개념처럼 보이는데 이를 복합 전략으로 설명하고 있음. 복합전략의 구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내부변환 전략은 기본적으로는 북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 우리가 하는 것에 한계. 결국 비핵 경제발전의 신병진 노선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3) 북한의 3단계 비핵화 주장에 따르면 결국 북한은 낙관론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완전한 비핵화는 의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됨.

1단계: 선제적 신뢰구축 조치

2단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부분적 비핵화

3단계: 조선반도의 비핵화 시각에 따라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핵군축 회담을 제안

- 북한 비핵화 의도에 대해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 단계적 비핵화 방식으로 완전비핵화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 ICBM 포기를 받아낼 수 있다면 북한과 타협할 가능성은 없는지?
- 핵시설-핵물질-핵무기의 포기 대 제재완화, 외교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경제지원의 맞교환 조합을 맞추는 방식으로 북미협상을 진척시키는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없는 것인가?

■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기주쿠대학 명예교수 발표에 대한 토론의 요지

1) 북의 핵 정책 의도를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 완성 후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체재보장 및 분쟁의 국지화를 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북한은 진정으로 북미 협상을 통해 핵 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 작년 말의 전원회의 보고에서 ‘새로운 전략무기’의 등장을 예고했는데 이를 핵-경제 병진 노선의 부활로 보지 않는 이유는?
- 북의 비핵화 정책을 3단계로 파악하고 제3단계는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핵군축 협상으로 보

는 하영선 교수의 시각과의 입장 차이는?

- 북미협상에서 북이 핵 리스트 제시하여 중국적으로 완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는지?

2) 북핵문제는 海圖 없는 항해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실 상의 남북 비핵-공존, 미 중-세력균형으로 2+2 더 나아가 2+2+2(러일)의 세력균형으로 남게 될 가능성을 시사.

- 헬싱키 체제와 같이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관계국의 현상승인과 규범 공유와 그 기반 위에서의 국익추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는 무엇을 의미? 북핵 보유가 현상유지를 이미 깨는 행위는 아닌지?
- 더 나아가 남북한 자신이 세력균형을 운영하기 위한 외교적 기술의 습득이 필요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GSOMIA의 일시 파기를 비판했는데 이는 어떤 맥락인지?
- 정용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경제보복으로 나오자 이레 대한 대항카드로 GSOMIA 카드를 사용한 것은 전략적인 오류였음은 인정.

3) 북미협상은 하노이 노딜 후 미국은 애초의 빅딜(일괄타결)에서 점차 단계론적 비핵화 쪽으로 진화(접근)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협상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할 수 있음.

- 최근 이란사태가 북미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 트럼프의 대북협상 의욕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4) 북미간의 협상이 가동되지 않는 한 북일이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되는지? 도쿄 올림픽 개최의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북일 협상의 가능성은? 북미 간 단계적 비핵화 합의가 이뤄져도 북일 협상에서 중거리 미사일 문제가 제기된다면 진척이 어렵지 않을까?

5) 북핵의 국제관계를 4인 지도자 간 게임으로 보는 흥미로운 시각 제시

김정은-미 위협할 수 있는 핵 미사일 완성 후 트럼프로부터 체제보장, 제재해제, 미군의 축소 등을 얻어내고 단계적인 비핵화로 대외관계 개선하여 개방개혁 추진

트럼프-빅딜(일괄타결)로 비핵화 실현, 대선국면에서 외교적인 성과 과시

문재인-전쟁회피, 남북대화 선행, 북미교섭 중재,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 적이고 단계적으로 실현

시진핑-제재결의 준수, 김정은의 후견인 역할담당, 긴장증대나 미국의 대북영향력 확대를 경계, 비핵화 진전과 평화체제 구축은 미군 감축에의 호재, 북미협상 실패 시 북한은 중국에 의존

- 이렇게 보면 4자 관계의 핵심 변수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개성과 전략
- 선거로 교체되는 건 한미 뿐, 북 중은 당분간 상수

■ **토론자:** 이원덕_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일본 도쿄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교부, 통일부, 동북아역사재단 민주평통 등의 자문위원 이었으며 한일신시대 공동연구 한국 측 간사 (2009-2013) 이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 객원연구원, 도쿄대학 객원교수,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장, 현대일본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 논문으로는 <한일 역사마찰의 정치학>(2019), <South Korea-Japan Relations in Crisis: How to Find a Way Out>(2019), 공저, 편저로는 《질곡의 한일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2017), 《일본 파워 엘리트의 대한정책》(2016), 《한중일 3 국관계: 새로운 협력을 향하여》(2015) 《한일관계 1965-2015 정치》(2015)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백진경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9) j.baek@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 본 토론문은 동아시아연구원이 2020년 1월 21일 개최한 [Global NK 핵inSIDE 토크] 2020 동아시아연구원 대북 통일전략 토론회의 자료입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



2세션 “북핵문제의 현황과 한반도 통일 전망” 토론편

백우열
연세대 교수

- 북핵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를 전략적 그리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가지 접근 방법의 필요성 환기. 항상 정부, 정책계와 학계에서는 몇몇 핵심적인 구조와 구체적인 변수들에 대해 파편적으로 자의적으로 접근함. 그러나 어떻게 이 구조와 변수들이 상호작용하는가, 이에 대한 적실한 분석과 이해가 가능한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결과들을 야기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결과들이 현실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의미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함.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북핵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는 연계되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상관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는가?
 - 한반도의 두 국가와 핵심당사국들로 구성된 ‘사회’ 조직의 구조는 무엇인가?
 - 2020년 북핵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에 근본적 영향을 미치는 이해상사국들의 새로운 국제정치적, 국내정치적 정세의 변화가 존재하는가? 더 나아가 어떤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는가, 아니면 기존의 구조에서 진자 운동을 반복하는가?
 - 여러 변수들의 미시적인 변화와 유지에 대한 모든 분석 수준(level of analysis)에서. 핵심 국가/체제, 시장, 사회 행위자의 세밀한 인과관계, 상관관계를 찾아야 함
 - 북핵과 통일 문제에 있어 북한의 김정은 권위주의(개인독재형 중심-일당독재형 보완 유형) 정권이 원하는 것으로 통합된 입장은 무엇인가? 달리 접근하여 북한 체제의 김정은 가족, 지배연합엘리트, (신흥자본엘리트) 그리고 일반 대중(농민/노동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겹치고 무엇이 상이한가?
 - 세계 전략적 수준에서 북핵, 북한, 그리고 통일 문제 접근. 누가 또는 어떤 국가와 그들의 국내행위자가 북핵 문제 해결과 (연계되었을 수도 있는)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가?
 - 예를 들어 한국과 한국의 국내행위자들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가?
 - 왜 한국은 북한과 통일해야 하나? 기존의 세 가지 논의 (1) 군사안보 위협 제거 (2) 경제적 통합 이득 (3) 민족주의적 성취 (4) 이산가족 등 humanitarian 목적. 이 외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이 4가지 편익을 한국과 북한의 다양한 엘리트, 시민계층들이 얼마나 원하는가?
- 핵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에 있어서의 한국과 중국.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구조는 이 두 국제정치적 문제에 있어 상당히 명확해졌음. 전 박근혜 정권의 친중->친미 전략과 싸드 갈등/제재가 의도하지 않았던 양국 간의 전략적 접근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줌.
 -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디까지 올 수 있는가?
 - 중국은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어디까지 올 수 있는가?
 -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분리해 접근하는 중국은 한국 주도의 (또는 어떠한 형태의) 통일을 원하는가? 로 이어지는 전략적 논리의 연쇄를 고려할 수 있음.
- 중국과 한국의 힘의 비대칭성 (power asymmetry)에 대한 인지와 이 구조 속에서의 두 문제에 대한 이해 필요. 여기에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 강화로 국제 수준의 정치, 경제, 기술, 체제적 구조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필요.
- 새로운 구조적 변수의 시작? 한국의 신남방정책 본격화와 공고화의 의의. 한국은 의도하였건

아니건 Big boys' game에 들어가는 외교 전략상의 구조적 변화를 시도함. 이제 흔히들 이야기 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연관됨. 이러한 새로운 구조적 변수의 등장이 어떻게 북핵, 북한, 통일 문제의 구조와 각각의 국제정치적 국내정치적 행위자들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선제적 고려도 필요.

- 결국 북핵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를 (함께 또는 따로) 다루는 것은 모든 분석 수준에서의 구조들과 행위자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이것을 한국 정부와 한국 행위자들이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따라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와 한국 행위자들의 전략과 정책 결정과 실행은 부분적 이해들에 기반한 ‘신념’, ‘지향성’ 또는 어떤 종류의 ‘Wishful Thinking’에 따라 전개될 것임. 이는 북한과 다른 이해당사국들도 유사함.

- **토론자:** 백우열_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부원장. 연세대학교,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미국 UCLA 에서 비교정치, 국제정치, 정치사상을 공부하였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와 성균중국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칭화대학교, 중국사회과학원, University of Hong Kong 등에서 연구원으로, 외교부 국정과제 평가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학술적-정책적 연구 분야는 글로벌 전략과 국내-국제정치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아시아의 안보경제, 정치경제, 국가사회, 독재/권위주의, 소프트-하드-샤프파워와 공공외교 등이다. 또한 사물정치론(Politics of Things)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가고 있다. 주요 저작은 The China Quarterly, Political Science Quarterl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Modern Chin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The Pacific Review, The Pacific Affairs, Asia Europe Journal, 한국정치학회보와 다수의 정책 저널과 편집본에 게재되었다.

- **담당 및 편집:** 백진경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9) j.baek@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 본 토론문은 동아시아연구원이 2020년 1월 21일 개최한 [Global NK 핵inSIDE 토크] 2020 동아시아연구원 대북 통일전략 토론회의 자료입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



일본 시각으로 본 미북 비핵화 협상과 통일

시부에 치하루
마이니치 신문 서울지국 기자

■ 바람직한 남북통일의 방향성

북한 정부수립 70주년인 2018년 9월, 취재차 북한에 갈 기회가 있었다. 물론 그곳에서 자유로운 취재는 할 수 없었다. 김정은 경호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었고, 매스게임 등 집단주의가 강조되었으며, 열악한 통신 상황을 체험하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느꼈다.

김씨 일가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무게를 둔 북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경제발전을 이미 이룩한 한국, 두 나라가 통일될 것이라는 상상은 할 수가 없었다. 나에게서는 한국도 북한도 똑같은 외국이다. 그러나 나는 한국에서 살면서 외국에서 생활한다는 느낌을 전혀 들지 않는다.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북한보다 일본과 더 공통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미 70년 넘게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던 남북한이 조국통일을 이념적으로 버릴 수 없는 부분은 이해가 간다. 일본 측에서는 한국 정부가 ‘통일’을 강조하면 ‘적화통일’을 상상하는 사람도 있다. 한국이 지향하는 통일이 무엇인지 한국 측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통일은 남북한이 서로의 정치제도는 존중하고 유지하면서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평화통일’이라고 본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제재 완화는 있을 수 없다. 경제제재 완화가 그런 통일방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 현실적인 전략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이란문제를 비롯한 중동정세 불안정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북한도 작년 말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조건에서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매여있을 근거가 없어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대화 여지는 남겨놓고 있다. 올해도 2019년에 이어 미북 간 교착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 와중에도 북한이 핵물질 생산,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과 한국이 어떤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본 입장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IRBM)에 대한 위기의식이 강하다. 또한 미국과 북한이 스몰딜(small deal)에 합의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포기만으로 타결될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도 긴장이 높아지는 것도 원치 않는다. 북한의 중단거리탄도미사일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는 동일하다.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의 협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도쿄올림픽을 활용할 수 있다.

■ **일북 협상 재개 가능성**

아베 정부가 북한에 대해 무조건 대화 입장을 내놓을 수 있던 배경에는 아베 총리가 2002년 미북 정상회담 당시 관방부 장관으로서 동행한 사람이라는 사실도 있다. 일본과 북한의 물밑교섭이 계속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북 협상의 재개는 북한에 달려 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식민지배에 따른 피해보상금 조로 많은 돈을 낼 명분이 있는 일본이라는 카드를 절대로 버릴 수 없다.

다만, 납치자 문제가 미제로 남아 있고,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이 없는 현 시점에서 일북협상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북한은 청구권과 관련해 한일갈등의 원점인 강제징용문제에도 주목할 가능성도 있다. 강제징용 문제에서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 **토론자:** 시부에 치하루_ 마이니치 신문 서울지국 기자. 도쿄대학 교양학부를 졸업하고 2003년 마이니치신문에 입사했다. 오사카 본사 사회부, 도쿄 본사 외신부를 거쳐 2018년 4월부터 서울지국에서 특파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공저로는 《간병살인: 벼랑 끝에 몰린 가족의 고백》(2018)가 있다.

■ **담당 및 편집:** 백진경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9) j.baek@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 본 토론문은 동아시아연구원이 2020년 1월 21일 개최한 [Global NK 핵inSIDE 토크] 2020 동아시아연구원 대북 통일전략 토론회의 자료입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